2010 년 9 월

개혁의 실현(Making Reform Happen)

경제위기 시의 구조적 우선순위

보고서 내용

위기 출구전략과 구조 개혁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국가별 특이 요인은 정책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개혁 추진방법에 관해 국가와 개혁 분야를 관철하는 교훈이 있는가?

OECD 국의 경험이 주는 개혁분야별 교훈은 무엇인가?

- *상품시장 개혁*
- *노동시장 개혁과 최근의 경제위기*
-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거*
- *친성장적인 조세 개혁의 실현*
- *환경정책 개혁의 추진*
- *사회정책 개혁: 교육과*
- *보건부문의 과제*
- *행정 개혁: 어떻게 개혁당국을 개혁할 것인가?"*
- *규제 개혁의 구상*
- *재정건전화 개혁의 추진*

경제위기는 개혁을 어렵게 하는가, 아니면 수월하게 하는가?

위기 시와 이후의 개혁 추진을 위한 OECD 의 역할은?

상세 정보

추가 문헌

요약

경제위기는 개혁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OECD ' 개혁의 실현(Making Reform Happen: MRH)' 프로젝트의 분석 결과는 그 동안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지적해 온 이러한 위기와 개혁 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본 자료에서는 정부가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제위기가 주는 기회를 어떻게 ' 포착'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노동시장, 상품시장, 퇴직, 교육, 의료, 세제, 환경 등 다양한 정책분야가 각각 안고 있는 특수한 개혁의 도전과제들과 그 해결책을 검토한다. 또한 ' 개혁 담당자를 개혁(reforming reformers)' 하는 방법 혹은 공공 행정기관의 업무수행방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분석한다.

정책 개혁에 관한 OECD 의 MRH 사례 연구는 개혁 담당자에게 어떠한 만능적인 ' 도구(toolkits)' 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러한 도구의 존재 여부도 확인시켜 주지 못하지만, 모든 개혁과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공재정의 건전성**은 개혁의 진척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개혁 권한 위임**이 중요하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 **견실한 연구와 분석으로** 정책설계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 개혁의 결정에서 시행까지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제도가 필**요하다.
- 구조개혁의 성공에는 **시간**이 걸린다.
- **리더십**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 개혁이 성공하려면 통상 **수차례의 시도가** 필요하다.
- **개혁 반대자를 개혁에 참여**시키는 것이 그들의 반대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보다 낫다.
- 개혁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여부, 보상의 시기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볼 때, 각국 정부는 국제비교 연구와 정책 대화를 통해 ' 정책 학습' 과정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정책오류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OECD 는 사례 수집, 국제비교 가능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 제공, 국제적인 지식 공유와 같은 핵심 기능을 통해 각국의 개혁 추진을 적절히 지원하고자 하는 준비와 의지를 갖추고 있다.

© OECD 2010

Issu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ECD. The opinions expressed and arguments employed herein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views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위기 출구전략과 구조 개혁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개혁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탐구

지난 몇 십 년간 OECD 국가들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정책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정책 개혁의 목적은 노동력 활용도와 생산성을 높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유연한 대응력을 키우며, 형평성 및 환경의 질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보다 잘 대처함으로써 후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영역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강도, 범위 및 시점은 국가마다 그리고 문제 영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개혁이 지체되거나 아예 후퇴하는 일 또한 빈번히 일어났다. 실제로 각국 정부는 개혁 실현과정에서 정치적, 기술적 성격의 커다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OECD 는 2007 년 이후, MRH 라고 하는 범 OECD 적 프로젝트의 기치하에, OECD 국가들의 개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하고 이러한 선상의 노력을 강화하여 왔다. 개혁의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각국 정부의 개혁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전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 위기의 여파라는 작금의 맥락에서 그 의의가 각별하다. OECD 국가들이 많은 영역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 회복기반이 취약한바, 이러한 회복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한편, 당면한 재정 문제 해소에 치중하느라, 우선순위가 높은 여타 구조적 개혁과제를 계속 미루어서도 안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강구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목표를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정정책과 성장촉진적 구조 개혁을 신중히 배합,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종래의 ‘ 정통적 정책(policy orthodoxy)’의 위상이 일부 정책영역에서 흔들리게 된 만큼, 보다 더 어려운 과업이 될 것이다. 물론, 위기 이후 최근 일어난 일들이, 개혁과제 다수에 대한 종래의 이해나 주장들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의 위기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논거를 확인·강화하는 데 크게 일조한 면이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금융규제와 같은 영역에서는 소위 ‘ 최선안(best practice)’으로 수용되던 기존의 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 정부들은 새로운 개혁의 해법을 수용함에 있어서, 신중함과 과감함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자료는 MRH 프로젝트의 작업선상에서 현재까지 얻어진 연구 결과를 정리, 소개한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먼저 9 개 공공정책 부문에 걸쳐, 분야별 개혁의 특수 도전요인을 검토하고 그 극복방안을 살펴본다. 이 부분은 OECD 사무국의 분야별 담당 연구국(directorates)들의 책임하에 수행된 일련의 개혁사례 연구에 기초한다. 이들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 국가 전반의 동향과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는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개혁을 보다 잘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국가 별 특이 요인은 정책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공통된 도전, 그러나 다양한 배경

OECD 국가의 정부들은 현재 수많은 공통의 개혁과제를 안고 있지만, MRH 분석은 구체적인 개혁의 장애요인 해소라든가 가장 시급한 개혁의 우선순위 식별 등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떠한 만능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않는다. 개혁 담당자가 직면하는 도전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정책 설계 및 개혁 전략 채택에 있어 각국 특유의 제도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 어떤 문제의 국가 간 공통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헌법 질서, 정치적 맥락, 정책과정, 기타 개혁의 제반 환경변수들은 국가 간에 상이하다.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 단순 이식(transplant)된 정책과 제도가 다른 국가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통상 어느 정도의 변용(adaptation)이 필요하다. 게다가 연금 개혁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인구구조,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따라 상당히 다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개혁의 동기, 배경은 물론 바람직한 개혁의 내용도

© OECD 2010



국가 특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H 연구가 입증하듯이 국제비교 연구는 유용한 작업이다. 첫째,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차이를 떠나서 OECD 회원국들은 모두 인구고령화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의 도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정 제도와 정책에 있어 국가·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지만,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많은 정책영역에서 점차 공통된 접근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실제 일부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제도와 정책의 수렴(convergence) 현상이 관측된다. 공통의 도전에 직면한 OECD 국가들이, 다양한 국내 환경을 뛰어넘어 각자의 견실한 거시경제정책 및 구조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통의 제도적 해법(적절한 국가별 변용을 요하지만)을 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인 중앙은행, 재정준칙 및 독립된 재정기관, 강력한 일반경쟁법 및 주무당국, 독립적인 규제기관, 정책 공공자문을 위한 제도, 그리고 규제영향분석(RIA)과 같은 장치 등이 국가 간 제도 수렴의 좋은 예이다. 이는 각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만 정책과 제도의 국가간 학습, 이전(transfer)이 일어날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개혁 추진방법에 관해 국가와 개혁분야를 관철하는 교훈이 있는가?

개혁의 관리: 일반적인 교훈

OECD 경험에 대한 MRH 연구는 개혁 담당자에게 어떠한 만능의 '도구(toolkits)'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런 도구의 유무 여부조차 확인시켜 주지 못하지만, 개혁의 과정과 성과에 관한 괄목할 만한 규칙성들을 제시한다. 여러 정책분야에 공통된, MRH 분석작업의 핵심 주제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개혁 추진에 있어 ***선거로 권한을 위임 받는 것(electoral mandate)***이 중요하다. 이것은 MRH 작업에 활용된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는 가장 견실한 결과의 하나이다. 선거를 통한 개혁 권한의 위임은 기본공공서비스 (의료, 교육, 행정 등), 노동시장, 연금, 환경 등과 같이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된다.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정부가 유권자에게 선거에 앞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 의미 있는 개혁 권한이 중요한 만큼, 효과적인 ***의사소통(effective communication)***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개혁사례를 보면 개혁의 필요성을 유권자와 이해 당사자에게 설득하고, 특히 개혁 포기의 비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다각적이고도 일관된 노력이 수반된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경우, 현상유지(status quo)의 비용은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invisible opportunity costs)'이기 때문에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개혁의 관건이다. 개혁의 장기 목표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특히 위기 시에 중요한데,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고식적으로 추진된 개혁사례를 보면 개혁의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통 방식이 일방적인 '홍보(marketing)'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개혁안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개혁안의 도입 가능성은 물론 개혁안의 품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견실한 연구와 분석(solid research and analysis)***을 바탕으로 정책 개혁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MRH 분석 결과에 따르면, 증거(evidence)와 견실한 분석에 기초한 개혁 논거는 관련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개혁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만일 개혁 옹호자들이 개혁의 편익에 대한 폭넓은 일반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개혁 반대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증거에 기초한(evidence-based) 접근방식에 따르는 도전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정책 영역별로 크게 다르다.
- 앞서 말한 도전요소들을 넘어서려면 개혁의 결정에서 집행까지, 개혁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appropriate institutions)***가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분석의 영향력은 분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다양한 정치계층, 이해관계자 전반의 신뢰를 받는 권위 있고 중립적인 기관이 제공하는 연구 결과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전문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역량 있는 기관이 필요한 전부는 아니다. 개혁의 집행과정을 주도, 감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관이 종종 요구된다.

- ***리더십(leadership)***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MRH 과제 맥락에서 작성된 거의 모든 평가보고서는, 개개 정책입안자이든 개혁 집행 전담기관이든 이들의 강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다수 연구물들은 특히 개혁 지지의 정부 내 결집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 내에 합일된 개혁안이 없을 경우 정부는 혼란스런 개혁 메시지를 내보내게 되고, 반대자들은 이러한 혼란을 이용하여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향식 접근방식의 개혁이나 행정부에 의한 일방적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방적 개혁이 때로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고 개혁가에게는 정치적 수완과 추진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OECD 경험을 보면 효과적인 리더십의 요체는 순종(compliance)이 아니라 동의(consent)를 이끌어 내는데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구조 개혁의 성공에는 ***시간(time)***이 걸린다. MRH 분석의 개혁 성공사례를 검토할 때, 개혁의 준비와 채택까지 수년, 집행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해 가장 성공하지 못한 개혁은 급하게, 어떤 경우는 당장의 압력에 대한 고식적 대응책으로서 추진된 경우가 많다. 정책 개혁에 있어서는 " 서두를 수록 원하는 개혁은 더 지체될 수도 있다(More haste can indeed make less speed)" 는 역설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위기가 개혁 추진을 위한 '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 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개혁 준비를 위해 사전에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통 ***수차례의 시도(several attempts)***가 필요하다. MRH 및 OECD 의 관련 사례 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개혁의 다수가 초기에 좌절을 겪었다.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도 관련 개혁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후의 동일하거나 혹은 좀더 포괄적인 범위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MRH 연구들은 ***개혁 반대자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개혁에 대한 저항은 사안에 따라 그 성격과 강도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이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

- 개혁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사람들을 ***참여(engage)***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개방적, 수용적인 정책 협의과정을 통해 개혁의 모든 갈등(conflict)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집단 간의 신뢰 증진 등의 효과를 통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 그러나 ***개혁의 잠재적 피해계층에 대한 양보*** 때문에 개혁의 본질을 훼손할 이유는 없다. 전체적인 개혁의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이들 계층을 장기적으로 이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개혁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여부, 보상 시점 및 보상 방식*** 등은 거의 모든 연구가 제기하는 문제이다. 보상이 미흡하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 있는 반면, 보상이 지나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개혁의 효과 자체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보상전략은 ' 기득권 보호(grandfathering)' 와 점진적 이행(피해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의 두 가지이다. 특정 개혁의 피해를 다른 분야 개혁의 득으로 상쇄하고자 하는 ' 이면 보상(side payments)' 방식은 그 사용빈도가 떨어진다.

© OECD 2010

OECD 국가 경험에서 얻을수 있는 개혁분야별 교훈은 무엇인가?

정책분야별로 본 개혁의 실현

상품시장 개혁

시장개방 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OECD 회원국 간에 상당한 수준의 ‘ 수렴’ 이 이뤄진 분야이다. 과거에 경쟁에서 보호된 부문을 개방하는 것과 함께, 경쟁 체제 및 제도를 강화하는 추이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종종 주요 경제위기를 그 배경으로 하여 국제 경쟁 압력, 국제기구 및 협약 등이 이러한 추세적 변화를 이끄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기, 통신 등의 부문에서는 기술 변화가 정책 변화의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기술 변화로 인해 기존의 비교역 부문이 교역부문으로 전환하거나 과거 고도의 자연독점체제가 지배적이었던 부문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같이 시장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혁신활동이 촉발되고 이것이 다시 시장 경쟁을 확산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1990 년대 초반의 호주의 경험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많은 사례를 볼 때, 상품시장의 규제 개혁은 거시경제상의 부정적 충격에 정부가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규제 완화는 필요한 자원의 재배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사업비용 감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아무리 국민경제적으로 이롭고 또 전체적인 비용-편익 평가에 의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개혁의 불이행, 즉 현상유지(status quo) 비용이 흔히 숨어 있는 비용인 만큼 이 점을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흔히 개혁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질 기업,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자리 등, 개혁의 대가를 치르게 될 대상은 뚜렷한 반면, 현상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은 분명치 않다. 실제로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기업이나 개발하지 않은 사업부문, 그리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고용규모 등은 일일이 식별하기가 어렵다. 현상유지 비용과 개혁의 잠재 혜택을 계량화하고 널리 공유하려는 굳은 의지가 개혁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성공적인 상품시장 개혁사례를 보면, 보통 이해관계자(생산자 및 소비자)가 개혁으로 인해 급격한 득실을 겪지 않도록 하는 개혁의 이행조항(transition arrangements)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상황은 반경쟁적인 규제정책의 지대(rents)가 자산가치에 이미 반영되었을 경우이다. 현재의 자산 보유자들은 기존 정책의 혜택을 미처 받지 못한 채, 경쟁촉진적 개혁으로 인해 손해만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도입, 이행 기간이 길어 지길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상이나 다른 형태의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개혁과 최근의 경제위기

세계 경제위기는 많은 OECD 국가들이 안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특유의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2009 년 OECD 각료급 이사회에서는 재취업 방안과 경기적 실업이 구조적 실업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개혁이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노동시장의 ‘ 핵심(core)’ 개혁을 추진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가 입증하듯이, 실업 수준(level)이 높을 때는 노동시장 개혁 압력이 더 높은 반면, 실업이 빠르게 증가(increasing)하는 상황에서는 평생계약 정규직 등 소위 노동시장 내부자(insiders)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고용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바, 경기 침체기에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존 고용보호제도(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의 어떠한 약화에도 반대할 유인이 더 커지며, 정부 또한 개혁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상실 효과를 우려하여 EPL 개혁을 꺼릴 수 있다. 따라서 침체기의 노동시장 개혁은 신규 취업자, 비정규직 계약근로자, 실업자 등 소위 노동시장의 외부자(outsiders)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개혁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 이중구조(dualism)’ 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혁의 정책 시차(lags)이다. OECD 국가의 경험을 볼 때, 노동시장 개혁은 경제가 위축된 시기에 설계, 채택된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 OECD 2010



개혁의 집행이 보다 수월해질 때 집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개혁 착수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바로 경기 침체기 직후라고 할 수 있다.

연금제도 개혁의 논거

연금 개혁은 개혁의 취지 등에 대한 일반인들과의 대화가 특히 중요하고 또 그 잠재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부문이다. 그 급박성에 대해서 가끔씩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지난 20 년간 일반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아니 필연성에 대한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보다 수월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특히 공공연금제도에 대한)에 대한 공개 토론이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해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결과 연금제도 개혁의 우선순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에 내포된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널리 확산된 상태이며, 실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OECD 국가의 관련 경험을 볼 때, 면밀한 연구와 폭넓은 자문의 필요성, 조급한 추진의 위험, 일반인 홍보의 중요성, 선거를 통한 분명한 권한 위임 등 앞서 지적한 개혁의 일반적인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성공적인 연금 개혁의 경우, 흔히 이행기가 긴 편인데, 이는 고령층 등 연금 개혁 논쟁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이해집단의 개혁 저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결국 다수의 연금 개혁은, 고령층은 정책 변화의 부담을 지지 않는 반면, 젊은 층이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

친성장적 조세 개혁의 실현

친성장적 조세 개혁(Pro-growth tax reform)의 기본 원칙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더욱 중요하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된 가운데, 많은 국가들은 향후 몇 년간 세수기반 확대나 세율 증가를 통한 세수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노력이 경기 회복에 미칠 영향은 결국 성장을 덜 왜곡하고 성장을 덜 손상하는 그런 새로운 수입원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충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성장친화적 조세 개혁은 간소성, 형평성, 행정적 편의성, 잠재적 이행 비용 등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저항은, 개혁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all-encompassing) 정책 입안자는 편의상 혹은 선거 등 정치적 목적상 특정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 변화를 선택한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 이러한 선상의 조치는 그 효과가 특정 수혜자에게 집중되고 그만큼 가시적인 반면, 그 비용은 납세자 전체에 분산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많은 국가가 대규모 예산 적자를 안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상당한 수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여하한 개혁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추가적인 부담이다. 실제 납세자들이 개혁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도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된다.

전반적인 개혁의 구도도 매우 중요하다. 특정 정책변수 몇몇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근로소득과세의 경우처럼 심지어는 조세-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개혁의 취지와 효과 등 관련 사안을 보다 잘 알리는 데 유효할 수 있다. 곧, 개혁의 편익과 조정 비용을 널리 분산시키면서 국민경제적 왜곡 효과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개혁 패키지를 통해 개혁의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세제 개혁은 과정이 길고 복잡한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포부가 담긴 개혁목표를 뚜렷이 천명함으로써 관계자에게 개혁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특수 이익집단의 로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제안된 개혁의 잠재영향(납세자의 행태, 세입, 형평성, 행정 편의 등의 사안에 관한)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세무행정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개혁 집행의 시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기업과세 변화는 단계별로 적절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정기 과세나 주택 보유세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정책 개혁의 추진

구조 개혁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 정형화(stylized)된

© OECD 2010

특징' 의 하나는, 개혁의 비용은 개혁 초기에 일부 집단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반면, 개혁의 편익은 오랜 시간에 거쳐 많은 집단들에 분산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환경정책 개혁***에 있어 특히 현저하다. 환경정책 개혁은 모든 사람의 이득을 위하여 일부 집단의 손실을 요구하는데(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이 제조업체에 새로운 비용을 부가하는 경우와 같이), 개혁의 혜택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실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혁에 대한 논쟁은 개혁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개혁의 소득 재분배 효과, 개혁의 자산가치 충격효과(개혁 이전 상황의 소득 흐름을 반영한 기존의 자산가치가 개혁으로 인해 급락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더하여 개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또 다른 장애요인 인바, 개혁의 논거로 제시된 증거가 개혁의 반대론자에 의해 부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경의 가치를 정량화(화폐화)하는 적절한 기법,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개혁의 분석적 방법의 선택 자체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OECD 회원국들의 최근 경험은 환경정책 개혁 추진에 관해 많은 교훈을 준다. 첫째, 다른 정책영역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연구만으로 이해갈등 등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 중심의 논거는 이해관계자 및 유권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셋째,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 때문에 기존 제도와 규제체제가 정책수단의 선택을 어느 정도 좌우한다. 넷째, 개혁의 경쟁력 및 재분배 효과는 특정 조치에 대한 부분적, 일시적 면제, 이행 지원. 장기적 이행 기간 등을 통해 미세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오염 유발 활동을 보호하거나, 통제되어야 할 사업에 자원이 오래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배출권 거래제도(permit trading)를 도입해야 한다면, ' 기득권 보호(grandparenting)' 차원에서 주요 오염자들에게 최소 몇몇의 무료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정치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배출권 ' 완전 경매제도(complete auction)' 로 점차 이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정책 개혁: 교육과 보건 부문의 과제

보건체제와 교육체제는 두 분야 모두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많은 공통의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편이다:

- 보건체제와 교육체제는 매우 경로 의존적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서로 다른 국가 배경에서 매우 특수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 따라서 무엇이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과거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이 두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들은 매우 잘 조직된 이해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치인보다 더 높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특히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개혁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건 및 교육 체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된 견해가 없다. 두 분야 모두 각자의 복잡다단한 정책목표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결과물의 질과 가치를 측정하는 신뢰할 만하고 보편적인 지표(indicators)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증거기반형 개혁은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전제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 성과에 대한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생성하기 위한 국내기구나 국제기구의 역할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OECD 의 ' PISA' 작업(15 세 국제학력 평가)이 그 고전적인 예라고 하겠다.

- 두 분야의 정책은 구상에서 집행까지 그 시차가 매우 긴 편이다. 어떤 개혁이 효과를 나타내고 이를 일반인들이 인정할 때면 이미 원래의 개혁 담당자들이 현직에 있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다.
- 이 두 분야에는 소위 보편적인 모범관행(best practice)에 대한 합의된 견해가 거의 없다. 몇몇의 다른 정책분야에서는 견실한 정책체계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는 개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준거나 모형이 없다.

© OECD 2010

이같이 험난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많은 OECD 국가들은 교육 개혁과 보건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들의 경험은 개혁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교훈을 준다:

- 의료 전문가나 교육자에게 큰 변화를 강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성공적인 개혁은 이들에 대한 상당한 양보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면에서 특히 보건 개혁은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인데, 설사 중장기적으로 비용 억제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단기간에는 늘 값비싼 양보를 수반한다.
- 이러한 협상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와 오랜 준비 시간이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이들 분야에서는 소위 ‘ 빅뱅(big-bang)’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 국제비교를 비롯한 보다 많은 그리고 보다 나은 통계자료와 분석 결과가 개혁에 유용하다. 물론 이들 증거자료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행정 개혁: 어떻게 ‘ 개혁 당국을 개혁’ 할 것인가?

행정 개혁은 개혁의 범위, 규모 및 복잡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보건·교육 개혁과 비슷한 도전요인을 안고 있다. 경로 의존성, 정책 시차, 정부부처 간 조율, 개혁의 영향을 직접 받을 공공부문 관계자의 지지 확보 등이 중요한 변수이다. 먼저, 공공서비스·행정의 품질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행정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시민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나 공공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행정의 내부 변화를 촉구하는 정치적인 요구로 발전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국, 행정 개혁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확고한 개혁 요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 개혁 담당자를 개혁(reform the reformer)’ 해야 한다는 근원적인 어려움이 있다. 많은 현직 관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조치 등 개혁당국 자체에 대한 개혁을 스스로가 설계, 집행해야 하는 모순적인 경우가 많다.

최근의 OECD 국가의 행정 개혁 경험은 이상의 도전요소와 직접 관련된 많은 교훈들을 제공한다:

- 개혁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지지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민의 주권의식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유용한, 예를 들어 전자정부(e-government) 정책과 같이 가시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조치를 보완적으로 병행한다면 개혁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가 보다 쉬울 수 있다.
- 개혁의 영향을 받는 공무원과의 폭넓은 협의도 중요한데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보완적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급여 개선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근무환경 개선, 근무 만족도 향상, 직무 전문성 개발 투자 증대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개혁 지지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개혁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
- 점진적인 개혁은, 도중에 피드백과 조정이 가능한 만큼, 개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따라서 개혁에 대한 저항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에 걸친 점진적 개혁을 위해서는 일관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정권 및 정부 교체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는 개혁 추진을 위한 독립된, 항구적 기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국제기구는 지식과 정보 공유, 정책 평가 및 정부 간 협력 촉진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 수범사례를 제공하고 국가 간 선의의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국제기구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규제 개혁의 구상

고품질의 규제 생산과 관련된 제도와 과정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먼저, 명쾌하고 구조화된 일반적인 정책 틀이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개혁에 대한 ‘ 범정부적이고 총체적인(whole-of-government)’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체제를 구조화하는 한편, 규제 개혁에 대한 고위급의 명시적인 의지, 그리고 정보 공유, 신뢰 및 협력에 유리한 규제문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확충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OECD 국가 간에 제도적

© OECD 2010

수렴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많은 국가들이 제도, 정치체제, 법률문화는 서로 크게 다르더라도 비슷한 개혁과제에 직면해서는 실제 매우 비슷한 해결책에 이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도와 정책의 이 같은 국제적 확산은 다양한 국가 간 대화의 장(Forum)에서의 협력을 통해 촉진되는 것이 확실하다.

재정건전화 개혁의 추진

1970 년대 이후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fiscal reconsolidation)*** 경험을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2007 년부터 극도로 악화된 OECD 국가재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에서 이러한 교훈을 적용하는 데는 다음을 고려한 상당한 변용(adaptation)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건전화 작업은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의 정책을 혼합하는 것이 보통인데, 많은 연구에 의하면 건전화는 특히 정부소비 및 이전(transfer) 차원의 지출 억제에 기초할 경우에 그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장에 대한 영향 면에서도 지출 억제에 촛점을 맞춘 접근이 수입 증대에 의존한 접근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유의미한 건전화 작업은 재정제도(institution) 차원의 커다란 변화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첫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세출 절약을 목표로 하는, 임의적이고 특별한(ad hoc) 조치에 의존한다. 이후,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선상에서 준칙 중심의 틀(rule-based frameworks)과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다. 유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1990 년대 스웨덴의 경험이 이러한 개혁 경로를 특히 잘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구조적 균형예산(structural balance-budget) 목표와 명목지출 상한제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합의·설정된 준칙을 위반하는 행위의 정치적 비용을 높이는 장치 또한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들의 효과는 개혁에 대한 현직 정치인들의 ‘ 주인으로서의 의식과 역할(ownership)’ 에 따라 달라진다. 근래에 들어서는, 재정준칙의 집행 등 예산 과정상의 맥락에서 일종의 전문관료적(technocratic) 역할을 수행하는 ‘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s)’ 혹은 이에 준하는 비당파적 기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은 재정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위기는 개혁을 어렵게 하는가, 아니면 수월하게 하는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 및 이후의 개혁에 관한 도전과제

세계 경제는 지난 반세기를 통틀어 가장 심각하고 지역적으로 가장 널리 확산된 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급박한 위기 국면은 벗어났지만, OECD 국가의 정부들은 아직도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조합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이 도움이 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나 이러한 과업은 그 전망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 경제위기의 급박한 경기충격에 대응하고자 2008~09 년 동안 구조 및 재정 정책 차원의 많은 비상조치들이 대거 도입되었는데, 이들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는 경기 회복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들 개혁이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표와도 잘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적인 과제이다.

정책 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경제위기는 상당한 ***개혁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MRH 연구 등 OECD 의 작업은 위기와 개혁 간의 이러한 관계를 대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지만, 동시에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개혁의 진척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공공재정이 건전할수록 성공적인 구조 개혁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의 관련 연구가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결과의 하나이다. 따라서 작금의 위기가 개혁에 미치는 영향은 불투명하다. 위기 자체는 개혁 추구의 유인을 강화할 수 있지만, 재정 상태는 정부의 개혁 역량을 제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통해 예산 및 성장 성과가 개선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혁이 야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정책상의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는 상당한 정책적 창의성을 요구하는 과업이다. 전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위기 시의 개혁은 단순한 불가피한 공공지출의 삭감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 시각에서 바람직한 과제로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주로 재정 압박에 대한 고식책으로 추진된 개혁은 그 압박이 완화됨에 따라 중단된 경우가 많다.

위기 시와 이후의 개혁 추진을 위한 OECD 의 역할은 무엇인가?

구조 개혁 추진과 OECD 의 역할

MRH 연구를 통해 개혁의 논거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데이터와 분석***이 있을 시에 설득력이 더 크다는 점이 입증되는데, OECD 는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 OECD 의 작업은 각 국가들이 각자의 성과나 정책을 국제비교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때 가장 유용하고 또 효과적이다. 예컨대 자국의 유권자 또는 엘리트 집단들이 만족스럽게 여기는 제도, 상황, 결과 등이 국제비교의 관점에서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국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식 공유의 중요성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종종 수차례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백하다. 각국 정부는 국제비교 연구와 정책 대화를 통해 국가 간 ' 정책 학습(policy learning)' 과정을 활성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책오류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OECD 는 또한 ***지속적인 점증주의(sustained incrementalism)*** 라는 개혁의 도전과제에 있어 각국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많은 정책 분야에 있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정권 주기를 넘어서는 장기간의 개혁과제들을 기간별로 잘 조율해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OECD 는 이에 관한 각국의 제도를 보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OECD 는 경제, 사회, 환경, 지배구조(governance) 등 주요 정책 부문 다수를 다루는바, 이러한 특성상 이들 다양한 부문들의 경험과 분석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부문을 넘어선 종합적 시각에서의 새로운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최소한 이는 어떤 분야의 정책이 다른 분야의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소위 ***정책의 분야 간 일관성(coherence across domains)***을 확충하는 데 유용하다. 더 나아가, 때로는 개혁의 분야 간 잠재적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ies) 및 시너지 영역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상승적인 효과를 지닌 다양한 분야별 개혁들을 적절히 조율,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개개 분야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개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OECD 의 이러한 다부문적 특징(multi-dimensionality)은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과 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중점을 둔 정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들 간의 상충을 극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OECD 2010

상세 정보

본 자료와 OECD MRH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illiam Tomps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Division,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tel.: + 33 (0) 1 45 24 15 76, email: william.tompson@oecd.org.

Cheonsik Woo, General Secretariat, tel.: + 33 (0) 1 45 24 76 84, email: cheonsik.woo@oecd.org.

참조 문헌

본 자료는 2010 년 5 월에 발간된 OECD Policy Note " Making Reform Happen: Structural Priorities in Times of Crisis" 의 국문 번역본이며, 영문 원 자료의 내용은 다시 OECD 의 보고서 *Making Reform Happen: Lessons from OECD Countries* (2010)에 포함된 자료에 기초합니다.

참조: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Lessons from Pensions, Product Markets and Labour Markets in Ten OECD Countries (2009)

Achieving Better Value for Money in Health Care (2009)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and Options for Global Action beyond 2012 (2009)

Economic Policy Reforms 2010: Going for Growth (2010)

Regulatory Reform for Recovery: Lessons from Implementation during Crises (2010)

Health System Priorities When Money Is Tight (Forthcoming, 2010)

Reforming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Forthcoming, 2010)

Ten Years of Regulatory Reform: Lessons for a New Regulatory Policy Agenda (Forthcoming, 2010)

상기 문헌은 OECD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www.oecd.org/bookshop.

OECD 간행물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도 온라인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www.oecdilibrary.org.

Where to contact

OECD Headquarters
2, rue André-Pascal
75775 PARIS Cedex 16
France
Tel : (33) 01 45 24 82 00
sales@oecd.org
www.oecd.org

Germany
OECD Berlin Centre
Schumannstrasse 10
D-10117 BERLIN
Tel. (49-30) 288 8353
berlin.centre@oecd.org
www.oecd.org/berlin

Japan
OECD Tokyo Centre
Nippon Press Center Bldg
2-2-1 Uchisaiwaicho, Chiyoda-ku
TOKYO 100-0011
Tel: (81-3) 5532 0021
center@oecdtyokyo.org
www.oecdtokyo.org

Mexico
OECD Mexico Centre
Av. Presidente Mazaryk 526, Colonia: Polanco, C.P., 11560, Mexico D.F.
Tel: (00.52.55.9) 138 6233
mexico.contact@oecd.org
www.ocde.org/centrodemexico

United States
OECD Washington Centre
2001 L Street, NW - Suite 650
Washington D.C. 20036-4922 United States
Tel : (00.1.202) 785.6323
washington.contact@oecd.org
www.oecdwash.org

© OECD 2010